

현장 기자의 항변



정확한 받아쓰기는 좋은 정치보도의 기본 요건

임성수 / 국민일보 정치부 기자



지난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의 말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표정부터 어조, 동작까지가 모두 기록 대상이다.

©news1

이보다 더한 ‘받아쓰기’는 없었다. 이보다 더한 ‘받아치기’도 없을 것이다. 지난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모든 정치부 기자들이 받아쓰고, 받아치느라 하루를 보낸 날이었다. 회견문뿐 아니라 질의응답 단어 하나, 토씨 하나 틀리는 일 없도록 받아쳐야 했다. 사전에 청와대에서 배포한 기자회견 원문과 대통령의 실제 발언이 달라진 것은 없는지,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이 어떤 어휘를 주요 사용하는지가 전부 받아쓰기 대상이었다.

이날 대부분 언론은 대통령이 ‘경제’라는 단어를 몇 번 썼고, ‘성장’이라는 단어를 몇 번 언급했으며, 이런 어휘 구사가 전년도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한 것인지 분석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정부 정책의 기조와 흐름, 변동을 추론해냈다.

정치부 기자의 숙명, 받아쓰기

대통령의 말만 받아쓴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표정부터 어조, 동작까지가 모두 기록 대상이다. 대통령이 특정 질문을 받고 곧바로 대답하는지, 아니면 머뭇거리는지도 다 취재 대상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청와대 출입기자뿐 아니라 정치부 모든 기자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받아쓰는 날이다. 분석과 전망, 그 이전에 받아쓰기가 있어야 한다.

기자회견 다음 날 대부분의 신문은 3~4개 면을 털어,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순으로 꼭지를 나눠 대통령의 발언을 모두 소개했다. 이보다 더한 받아쓰기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쓰기’만 했다는 비판은 나오지 않았다. 최고 권력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갖는 무게 때문이다. 받아쓰기는 정치부 기자의 숙명이다.

미디어 비평 매체, 저널리즘 전문가들 사이에서



‘받아쓰기’는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다. KBS ‘저널리즘 토크쇼 J’는 ‘타자수인가, 기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따옴표 저널리즘’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받아쓰기가 잘못된 정보나 의도된 거짓을 유포하는 통로로 활용돼온 나쁜 전례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한국 저널리즘의 맨얼굴이 드러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보도가 대표적이다. ‘전원 구조’라는 언론의 받아쓰기는 만하루도 되기 전에 희대의 오보로 밝혀졌다. 세월호 참사뿐 아니다. 2012년 대선 즈음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댓글은 없었다’는 경찰 발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적극적인 거짓말 유포였다. 하지만 언론은 미심쩍어하면서도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받아썼다. 이후 경찰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이미 선거가 끝난 뒤였다.

취재의 기본이 된 ‘받아쓰기’

권력은 늘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한다. 취재원이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자는 ‘받아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실 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 없이 함부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검·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출입처일수록 더 경계해야 한다.

어떤 기자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명제다. 하지만 여전히 열심히 받아쓰기를 하는 기자들이 있다. 정치부 기자, 그중에서도 특히 정당 출입 기자다. 최고 권력자, 최고 취재원인 대통령만 예외적으로 받아쓰는 것이 아니다. 정치부 정당 출입 기자의 하루는 받아쓰기에서 시작해 받아쓰기로 끝난다. 오전 일찍부터 시작되는 주요 정치인들의 라디오 인터뷰, 여야 지도부 회의, 국회 기자회견,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의 취재는 대부분 ‘받아쓰기’다. 공개 발언뿐 아니라 개별 대면 취재와 전화 취재도 모든 것을 받아치고, 녹음한 후 복기한다. 정당에 갓 출입하는 주니어 기자들은 정치인들의 말만 정확하게 복원해도 동료, 선후배로부터 유능한 기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타자수’라는 비아냥거림을 당하더라도 ‘말의 복원’은 정치부 기자의 기본 책무 같은 것이다.

맡은 사건·사실의 한 단면

정치부 기자는 왜 받아쓰는가? 정치인의 말이 다 ‘사실’이거나 그들의 주장에 전부 동의해서인가? 아니다. 사실을 담은 주장, 공감하는 발언뿐 아니라 사실이 아닌 주장, 동의할 수 없는 주장도 받아써야 한다. 그것이 취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가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28일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처럼 비쳐도 정신 장애인들이 많다”며 “이 사람들까지 포용하기 힘들 거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곧 막말 논란으로 확산됐다. ©news1

“
‘받아쓰기’ 비판의 핵심은
결국 기자들이 정치인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중계한다는 지적으로 수렴된다.
철저히 기록하되,
받아쓴 것만으로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누가 저렇게 말했다’는 전달에
치중하다 보면 진실은 휘발되고
선정적인 언어만 남기 때문이다.
”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이런 문제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논란될 듯’, ‘시민단체, 야당 비판 거세질 듯’ 같은 문제의식이 담긴 짧은 문장들을 덧붙여서 보도했다. 본질은 ‘받아쓰기’였다.

최근 뉴스 메이커가 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언도 마찬 가지다. 홍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어용 언론을 동원해 괴벨스 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 의원도 “문재인 정권은 선거로 선출된 포퓰리즘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장되고 선정적인 주장이 적지 않다.

이들이 SNS와 유튜브로 쏟아내고 있는 말에 과연 기자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 발언을 보도하겠는가? 아니다. 정치인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사건’이자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쓰는 것이다. 그들의 발언이 객관적·실체적 ‘진실’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참과 거짓이 섞여 있고, 논리와 감정이 혼재돼 있다. 거의 진실에 근접한 말도 있고, 새빨간 거짓말도 있다. 정치부 기자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 정치부, 그중에서도 정당은 더욱 말이 중요한 부서다. 정치는 말에서 시작해 말로 끝난다. 정치인의 말은 곧 권력이고, 말에 대한 철저한 기록은 권력에 대한 감시이기도 하다.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나는 정치

“뉴스는 역사의 초고다. 항상 옳을 수는 없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계속 써나가야 한다.” 2017년 개봉한 영화 ‘더 포스트’에서 워싱턴포스트 사주 캐서린 그레이엄이 한 말이다. 뉴스가 역사의 초고라면, 받아쓰기로 평화되는 보도는 어쩌면 초고를 쓰는 기초 작업일지도 모른다. 조선시대 사관들도 받아썼다. 1404년(태종 4년) 태종이 사냥을 나갔다 실수로 말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다. 태종은 좌우를 돌아보며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고 했다(태종실록 7권). 그러나 당시 사관은 태종이 말에서 떨어진 일, 떨어진 뒤 한 발언까지도

받아썼다. 그 기록이 있었기에 6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말에서 떨어지고 그 사실을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한 왕, 그것을 모두 기록한 사관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받아쓰고 녹취하는 정치부 기자들도 ‘알게 하지 말라’고 한 말까지 기록하는 사관과 다르지 않다. 정치부 기자들이 사관처럼 ‘정론직필’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만큼 말의 기록, 받아쓰기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회부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듯, 경제부 기자가 각종 경제지표를 확인하듯 정치부 기자는 정치인의 발언을 받아쓰면서 취재를 시작한다.

정치인의 말은 비판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받아쓰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쏟아낸 이후 정치인들은 대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맥락이 다르다’는 식으로 변명한다. 그래서 정확한 받아쓰기, 복원은 중요하다. 그 말이 낳은 파문과 논란,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정확한 ‘받아쓰기’는 필수다.

지탄 대상이 된 ‘받아쓰기’

‘받아쓰기’는 피할 수 없는 정치부 기자의 핵심 업무인데 어쩌다 지탄의 대상이 됐을까? 뉴스 유통의 변화가 결정적이다. ‘온라인 뉴스’의 만개는 받아쓰기가 곧바로 상품이 되는 시대를 열었다. 하루 단위의 뉴스 유통과 소비가 시간 단위, 분 단위로 단축되고 있다. 과거 정치부 기자들도 정치인의 발언을 하나하나 다 기록했다. 하지만 그렇게 받아쓴 내용이 곧바로 실시간 뉴스가 되진 않았다. 지면과 방송 분량의 제약, 개별 언론사의 게이트키플 기능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뉴스가 소비되는 온라인 뉴스 시대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정치인의 공개적 발언의 경우, 취재와 거의 동시에 온라인 기사로 출고된다. 실시간 중계 속도로 ‘속보’가 쏟아진다.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의 발언은 하나하나 쪼개

‘1보’, ‘2보’로 쏟아내는 경우도 많다.

온라인 뉴스가 대세가 되기 전이었다면 정치인의 발언 중 주요 발언과 그렇지 않은 발언을 골라내는 역할, 그러니까 뉴스의 취사선택과 게이트키플 기능을 기자가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뉴스 전성기를 맞으면서 뉴스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뉴스의 홍수 시대다. 공을 들여 쓴 기획기사보다 정치인의 발언을 거의 그대로 전달한 기사가 더 많은 독자를 끌어당기기도 한다. 받아쓰기만 해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다. 조회수는 곧 매출이다. 정치부 기자는 취재한 모든 발언을 누구보다 빨리 온라인 기사로 내보내야 하는 압박과 유혹에 시달린다. 그러니 정치부의 ‘받아쓰기 저널리즘’은 온라인 뉴스 시대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기자 개인의 직업윤리와 전문성 결여 탓으로만 몰아세울 순 없는 일이다.

‘받아쓰기’라는 비판에 당파성이 개입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다. 지지하는 정당·정치인에 대한 따옴표 보도를 반대하는 정당·정치인에 대한 따옴표 보도만큼이나 비판적으로 접근하는가? 우리 진영에 대한 받아쓰기는 ‘충실한 전달’로 이해하지만 상대 진영에 대한 보도는 ‘비판 없는 받아쓰기’로 폄하하는 ‘이중잣대’는 없는가?

정보 독점한 권력기관의 ‘언론 플레이’

정치인만큼이나 검·경찰의 발표를 받아쓰는 경우도 많다. 정보를 독점한 권력기관의 ‘언론 플레이’를 받아쓰는 것은 정치인의 주장을 받아쓰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검찰이 재판 전 각종 피의 사실을 누설하며 ‘여론재판’을 해온 폐해가 심했다. 그럼에도 유독 정치인 발언 받아쓰기에 비판이 집중되는 것은 ‘진영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보수 야당은 여당의 주장만 공중파 뉴스를 통해 과잉 보도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여당은 보수 신문을 통해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된다고 주장한다. 유튜브로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 미디어는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을 바탕으로 분석·재가공해 새로운 뉴스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오리지널’만큼 인기를 끌기는 어렵다. (출처·TV홍카콜라 유튜브 회면 캡처, ©news1)

몰려간 정치인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대안 매체’로 유튜브를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받아쓰기는 정치부 기자의 필수 업무로 명맥을 이어갈 것이다. 말을 기록하고 복원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치부 기자의 기본 업무다. 하지만 ‘받아쓰기’로 만든 뉴스 상품은 지금처럼 팔리진 않을 것이다. 유튜브는 받아쓰기 이전, 정치인의 육성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스피커로 자리 잡았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홍카콜라’는 조회수가 웬만한 기성 언론을 훨씬 뛰어넘는다.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 미디어는 이들의 유튜브 방송을 바탕으로 분석·재가공해 새로운 뉴스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어지간해서는 2차 상품이 ‘오리지널’만큼 인기를 끌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치부 기자는 이제 받아쓰기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전달에 치중하다 휘발되는 진실

일간지, 방송 등에서도 단순 받아쓰는 기사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웬만한 정치인이 아닌 이상, 정치인의 발언이 다음 날 그대로 지면에 실리거나 저녁 뉴스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온라인 뉴스에서

이미 소비된 기사를 다시 지면에 실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를 예로 들어보자. 온라인 기사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전달된 유 이사장의 발언을 대체로 그대로 소개하는 ‘속보성’이 강했다. 반면 지면기사는 유 이사장의 발언보다 알릴레오가 탄생한 배경, 유 이사장의 발언이 나온 맥락, 향후 행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정치부 기자들이 정치인의 공적 발언을 취재하고, 이후 배경과 맥락 취재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다. 최근 들어 각 언론사마다 ‘팩트체크’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받아쓰기’ 비판의 핵심은 결국 기자들이 정치인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중계한다는 지적으로 수렴된다. 철저히 기록하되, 받아쓴 것만으로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말했고, 누가 저렇게 말했다’는 전달에 치중하다 보면 진실은 휘발되고 선정적인 언어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언론의 ‘책임성’에 대한 질타이기도 하다. 독자와 시청자는 신속한 뉴스를 소비하는 동시에 한발 더 나간 분석과 풍부한 해설, 전망도 함께 요구하는 ‘까다로운 구매자’다. 정치부 기자는 잘 받아써야 하는 동시에, 받아쓰는 것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과도기에 놓여 있는 셈이다. ♣